

민주, '개혁 입법' 속도 조절론에 '쌈기'

“4대 입법 지지율과 관계없어...필요하면 하는 것”
참여정부 당시 속도 조절 잘못해 정권에 악영향
방송2법·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등 처리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이른바 '개혁 입법'의 처리 속도와 관련, 일각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럴 일 없다"며 쌈기를 박았다.

특히 3대 개혁 가운데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가장 큰 검찰개혁의 경우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인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동안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의 통과가 예상됐던 검찰개혁 스케줄이 어느 정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졸속 입법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청회와 간담회 등 대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과 수도권, 20대 청년층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꺾이는 추세라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개혁입법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현재의 검찰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체제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국민들의 삶에 혼란이나 불편을 겪어서 안 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취지"라며 "속도를 늦추라는 주문을 한 게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펴서 제대로 (개혁법안 추진을) 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경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대선 공약이었고, 대선 승리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개혁 입법 추진은 지지율과는 관계가 없는 이슈"라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안 하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지지율이 흔들린다고 해서 새 정부가 개혁을 멈추면 안 된다"며 "열린우리당 때도 4대 입법을 속도조절 한다고 했다가 결국 못해서 정권에 악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할 법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을 줬다"고 말했다. '개혁입법'과 관련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본회의를 열어 소위 MBC법(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상법을 처리할 예정"이

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 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회기 종료로 방송법만 처리했다.

이들 법안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상태라 민주당은 2시간 뒤 토론 강제 종료 및 표결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21-22일 본회의에서 4개 법안을 이른바 '살라미'

식으로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22일에는 국민의힘이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연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가 있으니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협의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정대로 할 때 투표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 해주겠다는 식의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22일 본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광주시의회 “소각장 건립, 주민 소통이 우선”

환복위 “입지 선정 절차 전면 공개” 촉구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이하 환복위)는 19일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을 위한 법적 절차에 앞서 주민 소통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환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 “광주 소각장 건립에서 가장 중요한 최종 입지 선정이 난항

을 겪고 있는 가운데 2차 주민설명회도 무산됐다”며 “급기야 광주시 공무원이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환복위는 “광주시는 주민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공고나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할 뜻을 내비쳤으나, 주민 공감에 핵심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복위는 “후보지 주민들은 공모과정에서

시의 위장전입 논란,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 건강 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록과 평가 과정을 전면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복위는 또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 후보지역 주민 2명만 포함돼 있어 해당 법률상 기준에 미달되므로 주민 대표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며 “공모 과정에서 불거진 위

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복위는 “소각장 건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 확대를 보장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협의체는 소각시설의 과학적 안전성과 환경·건강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복위는 “시장과 부시장이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주민 안전, 교통 대책, 편익시설 확충, 소각열 활용 방안 등 실질적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은진기자

조국, 이르면 목요일 복당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며 공개 행보를 이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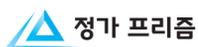
19일 유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가) 24-25일 1박2일간 부산민주공원을 평산마을, 봉하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부산민주공원은 조국혁신당이 창당 선언을 한 상징적인 장소”라며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당 지도부가 동행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조 전 대표) 혼자 방문하는 일정으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혁신당에 복당 신청을 마친 조 전 대표의 자격 심사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주 내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윤 수석대변인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오늘(19일) 개최될 예정이며 최고위원회의는 정례적으로 열리는 목요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재호 “석유화학산업 지원 방침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재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19일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구조개편 추진과 무임승차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자발적

인 동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수 등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이 중국의 설비량 증대와 신흥 중동국가들의 참여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마치 ‘끓는 가마솥 안의 개구리와 같은 상황’이라며 구조개편 참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무임승차'의 기준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 의식이 중요한 만큼 기업들도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규모 축소 및 개수 감축 ▲구조개편에 따른 세제 혜택 확대와 생산라인 변경에 대한 자금 지원 ▲기술 집약적이고 마진율이 높은 특수 화학 제품, 친환경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숙련된 인력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배치 ▲연구 개발(R&D) 투자를 늘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생산 공정의 효율성 극대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